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하려면 직주락 복합단지 구축”

〈직장·주택·오락〉

전남연구원 “팹 4기 들어서면 종사자 3만6000여명” “착공·완공·가족정착 단계별로 정주여건 개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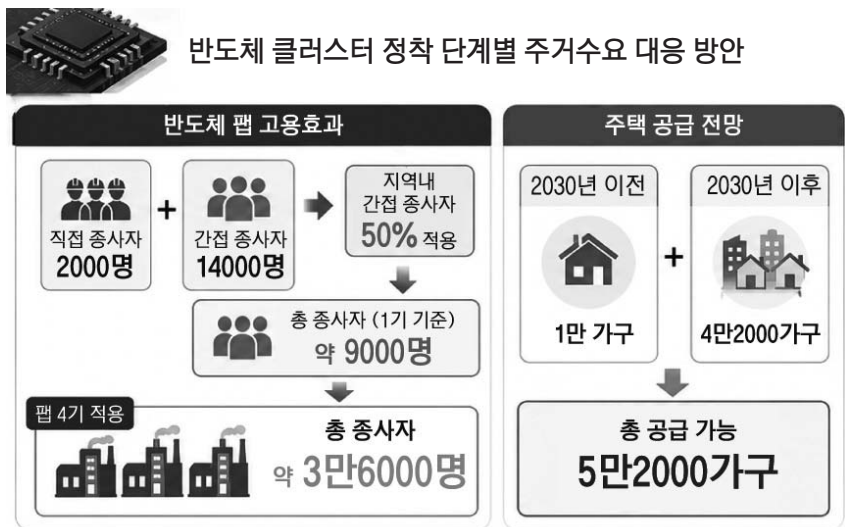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성공적하려면, 생산시설뿐 아니라 종사자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에 달려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남연구원은 6일 ‘JNI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애플테크놀로지가 광주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팹과 AI(인공지능)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대규모 인력 유입이 예상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주거수

요 대응 방안과 직주락 복합단지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연구원은 “국내의 주요 반도체 팹 사례를 분석한 결과 1기당 직접종사자는 평균 2000여명, 간접 종사자는 1만4000여명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지역 내 간접종사자 비율 50%를 적용할 경우 신규 주택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종사자 수는 9000여명으로 팹 4기에 적용하면 3만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팹 인근 지역의 주택 공급여건을 살펴보면 2030년 이전 1만 가구, 2030



년 이후 4만2000가구 등 총 5만2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도체 종사자들의 주택부족 현상은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반도체 팹 조성 단계에 맞춘 맞춤형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며 “공장 착공·

건설기에는 ‘반도체 정주수요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빈집 등을 활용한 ‘정주주택 예비목록’을 구축하고 팹 가동 초기에는 공공임대주택과 산업단지 공동기숙사, 단기 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공급해 인력 유입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는 팹 운영이 안정되는 확장·정착기에 맞춰 임시·단기 주거층에서 가족 정착형 주거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가족이 정주할 수 있는 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하고 국제 수준의 교육시설과 전문 의료서비스, 문화·여가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반도체 인재 양성과 취업, 재교육이 연계되는 산학연 교육거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교대근무자를 위한 의료서비

스와 생활편의시설, 문화시설을 도보생 활권 내에 집적하고 산업단지와 주요 정주거점을 30분 통근권으로 연결하는 광역생활권 조성도 필요하다”며 “기존 유희부지·공실주택·노후 주거지 정비를 병행하는 단계적 개발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연구원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은 종사자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사업 초기에는 기존 재고주택을 적극 활용하고 팹 운영 단계에서는 주거·교육·의료·문화가 결합된 자족형 반도체 특화도시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지속가능한 광역생활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차담희 민행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6일 기자회견에서 초대 지방직 정부부시장 후보 시민추천제에 관한 차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국내 최대 400MW 태양광 발전단지 해남에 들어선다

오늘 착공식...유희부지 479만㎡ 활용·28년 준공 목표
RE100 기업에 무탄소 전력 공급...발전수익 지역에 환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에 들어선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룰 핵심 프로젝트로 육성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해남군에서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

착공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박지원 국회의원, 고광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명현관 해남군수,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사장 직무대행, 지역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확대 정책의 첫 대형 사업 가운데 하나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 발전원가 절감, 지역주민 이익 공유를 함께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연해간척지 등 유희부지 약 479만㎡에 단일 부지 기준 국내 최대인 4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오는 2028년까지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10MW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조성에 농업과 재생에너지 생산이 공존하는 모델로 함께 실증할 계획이다.

주요 설비에는 국산 모듈과 셀, 인버터 등을 적용해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보탠다. 또한 활용도가 낮았던 대규모 유희부지를 사업부지로 활용해 발전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 상생 방안도 포함됐다.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와 이익공유 체계를 마련해 사업 기간 동안 약 1500억원 규모의 발전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와 조달,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서도 지역 기업과 주민 참여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발전단지가 준공되면 연간 529GWh 규모의 무탄소 전력을 생산해 약 1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생산된 전력은 RE100 참여 기업과 산업단지 등에 공급될 예정으로, 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K하이닉스 등 첨단 반도체 기업과 솔라시도 AI 국가컴퓨팅센터 등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제공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전남도와 해남군이 추진 중인 ‘솔라시도 AI 에너지진도시’ 조성에도 힘을 보태 기업 유치와 지역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남 태양광 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성장,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을 함께 실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유희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발전단가를 낮추고,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1면 ‘정부부시장’서 계속

민행배 시장은 브리핑 이후 기자실을 찾아 “시민추천제를 통해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려고 했다”며 “제 판단과 시민들의 선택도 크게 다르지 않아 최종 결정에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모 분야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시의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을 검토 결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행 조례에도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시장 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향후 부시장 배치 계획도 밝혔다.

그는 “무안청사에는 부시장 2명을, 광주청사와 동부청사에는 각각 1명씩 배치할 계획”이라며 “아직 3개 청사의 기능 분담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면 각 청사의 역할에 가장 적합한 부시장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직 정부부시장 2명과 국가직 행정부시장 2명 등 모두 4명의 부시장 체제로 운영된다.

국가직 행정부시장은 특별시장의 제정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현행 조례상 시의회 인사청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 계획대로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당 광주시당과 광주녹색당,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이날 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중단하고, 통합특별시에 맞는 종합적인 광역교통망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동안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추진해 왔으나, 공사 지연으로 개편이

연기되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도 장기간 지속돼 왔다.

통합특별시는 행정통합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구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시·군 간 노선 조정, 재정 분담, 행정절차 등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는 관련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광주특별시, 전국 최초 ‘섬 반값 여행’

숙박·음식 등 여행경비 최대 10만원 지역화폐 환급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8개 시·군 16개 섬서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 전남광주 섬 방문의 해’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전국 최초 섬 반값 여행을 시행한다.

섬 반값여행은 해당 시·구·군의 거주하는 관광객이 대상 섬에서 사용한 운임, 숙박, 음식, 체험 등 관광경비의 50%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관광지원 정책 사업이다. 여행경비 부담을 덜고 체류형 관광과 지역 소비를 함께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은 오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목포, 여수, 고흥, 보성, 강진, 영광, 진도, 신안 등 8개 시·군 16개 섬에서 운영된다. 신청은 10일부터 가능

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JG TOUR’ 앱 또는 누리집에서 여행 시작일 최소 5일 전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등록하면 승인 후 여행에 참여할 수 있다.

여행 중에는 방문하는 섬이 속한 시·군의 지역화폐(Chak) 앱을 이용해 숙박업소, 음식점, 카페, 체험시설 등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된다. 섬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하면 해당 섬이 속한 지역 가맹점 사용액도 인정해 관광객 이용 편의를 높였다.

여행을 마친 후에는 10일 이내 JG TOUR 앱에서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지역화폐 사용 내역과 관광 관련 소비 증빙을 확인한 뒤 적격 여부를 심사해 소비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을 재방문하거나 지역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행정안전부 ‘2026 섬 방문의 해’와 연계한 공동 홍보를 비롯해 JG TOUR 앱을 통한 남도 숙박할인, 1+1 투어 이벤트 등 통합 마케팅을 추진해 전남광주 섬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폭염에 멈춘 무안공항 참사 재수색 10일 재개 심층수색 진척률 77%...13일 한성숙 총리 유족 만남

폭염으로 일시 중단됐던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재수색이 오는 10일부터 재개된다. 관계기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을 고려해 작업을 오전 시간대에만 진행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6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군·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열고 재수색 재개 일정과 작업 방식을 논의한 끝에 오는 10일부터 수색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재수색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폭염으로 중단됐다. 관계기관은 작업 시간을 오전으로 제한하고, 기온과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단 당시 심층 수색 진척률은 77%였다. 다만 이 수치는 전체 재수색 대상 면적 5만8000㎡가 아닌 정밀 조사가 필요한 심층 수색 구역 1만9000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심층 수색은 육안 확인, 풀베기, 굴포, 체치기 등 4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심층 수색 대상이 아닌 구역은 우선 육안 조사

와 풀베기를 실시한 뒤 유해 추정물이나 유류품 등이 발견될 경우 정밀 수색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범정부부는 지난 4일부터 희생자의 미수습 유해와 유류품을 찾기 위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일대에서 전면 재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수의 유해 추정물과 유류품이 추가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식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유가족과 정부의 소통도 계속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최기영 선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단순 조류 충돌 여부를 넘어 기계 결함과 제어 상실 가능성까지 포함한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까지의 사고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조사 계획을 공유했다.

오는 13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가족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재수색 추진 상황과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유가족들은 사고조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미수습 유해 수습을 위한 철저한 재수색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